

# 농업 동향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효과를 제고하도록 개정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3년산 쌀(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쌀 단위생산량이 ha당 61가마에서 63가마로 늘어나도록 하는 산출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전 기반이 강화되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ha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로 고정하여 적용하던 것을 5년 주기로 재산정하여 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그 간의 농업기술 변화 등 여건변화가 반영된 현실화된 단위생산량을 적용해 증액된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산 쌀부터 새로운 단위생산량을 적용할 경우 올해 쌀생산이 평년작 수준을 유지한다면 농민에 대한 추가지원 총액은 산지쌀값에 따라 181억원(산지쌀값 : 157천원)~336억원(산지쌀값 : 145천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쌀 변동직불금 산정에 적용되는 목포가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수확기 쌀값 변동비율 산정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3개 연도 산술평균값 변동비율에서 5개 연도 절단평균값(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변동비율로 변경했다. 이로써 연도별 작황 및 가격편차가 심한 농산물의 특성상, 산술평균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값이 반영되어 일반적 가격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소득보전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

지법에 의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지임대차 기간 최소한 3년 보장

‘농지임대차 기간 3년 이상, 농지임대차 확인제도 도입, 농업진흥지역에 어업인주택 설치허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지법령이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우선, 임차농업인이 계획적·안정적인 영농의 보장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이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했다.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하였다. 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자격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된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7월 말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곡물가 급등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최근 미국 중서부(옥수수, 대두)와 흑해 연안(밀)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에서 지속된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료협회,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등 관련 기관과 국내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제곡물 관측시스템을 가동(7.25일 시범호 발간)하여, 농산물 수입, 가공, 유통 관련업체 및 수요자에게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향후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변화가 국내의 관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수입 콩의 정부 판매가를 고정 운영하고, 밀과 옥수수는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등 가격 인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콩의 경우, 수입 콩의 정부 판매가(1,020원/kg)를 고정하여 운영하고 옥수수의 경우, 사료원료에 현행 할당관세를 지속추진하며, 밀의 경우, 필요하면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산 곡물의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국제 곡물가의 변동에 대처한다. 밀의 경우, 우리밀의 생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밀 자급률을 2015년에 10%까지 확대하여 밀의 수입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군 급식용에 사용하는 수입밀 제품을 우리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농협매장 내 우리 밀사용 제빵코너(빵굽는 마을)를 현재 3개소에서 연말까지 전국 80개 매장가

지 확대하는 등 우리 밀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2012년 국산 콩 14만톤 생산을 목표로 논 소득다양화사업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72천ha까지 확보하고, 「콩 재배단지 농가수령 300kg/10a 달성 프로젝트」를 통해 2012년도 10a당 생산량을 200kg까지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시설재배 잎들깨 질소 윗거름 시비량 찾았다

- 농촌진흥청, 토양염류집적·환경오염 방지 기대 -

시설재배 잎들깨의 생육에 필요한 질소 윗거름 양을 손쉽게 알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잎들깨 시설재배지의 질소 비료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토양의 질산태질소를 현장에서 신속 정확히 분석해 질소 윗거름 시비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립한 시비기준은 토양 중 질산 이온이 많을수록 분홍색이 진해지는 검색지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토양의 질산태질소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질소 윗거름을 안 줘도 되거나 잎들깨 1마디 생육 및 2잎 수확을 기준으로 시비량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식밀도가 7.8×11cm인 경우에는 질산태질소가 30mg/kg 이상이면 잎들깨 1마디 생육과 2잎 수확 시까지 질소 윗거름이 필요 없으며, 10mg/kg 이하이면 잎들깨 1마디 생육에 필요한 질소를 3.14kg/10a까지 줄 수 있다. 또한 재식밀도가 5×11.5cm인 조건에서는 질산태질소가 40mg/kg 이상이면 질소 윗거름을 주지 않아도 되며, 10mg/kg 이하이면 질소를 5.0kg/10a까지 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립한 시비기준을 전국의 잎들깨 시설재배 농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현장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 시설재배 오이, 애호박 등에 대한 질소 윗거름 시비량 기준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연구사는 “이번에 확립한 시비기준은 토양 중 질소 함량에 따라 웃거름의 양을 적량화한 것이다.”라며, “질소 비료의 과다 사용을 방지해 염류 직접을 피할 수 있고, 질소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유휴농지 복원하여 귀농인에 농지공급 추진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이주 초기 이들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농지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11년 기준 10,503가구(23,415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이주 초기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우선, 금년 중 유휴농지 1,000ha를 확보하여 내년 영농기 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유휴농지는 농업 수익성의 악화, 노동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면적은 최대 25만ha(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농지은행 활성화 및 유휴농지 관리방안 연구, 2007)으로 추정된다.

금년에는 경운, 정지작업 등으로 쉽게 농지복원이 가능한 유휴지 1,000ha를 확보하여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의 신청을 받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에는 유휴농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지의 전체면적을 파악하고 유휴지 관리방안을 수립, 귀농인에 대한 농지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된 유휴지는 농지로 복원하거나 비농업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유휴지를 생산성 있는 농지로 복원하여 귀농인에 지원해주는 효과와 국토자원의 활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축용 생균제 선택 이렇게 하세요.

- 공인기관 검증하고 유용미생물수 많을수록 효능 커 -

농촌진흥청에서 축산농가가 직접 가축용 생균제를 쉽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가축용 생균제는 약 500여 품목으로 제품 수가 너무 많고, 미생물 종류 또한 비슷비슷해 유사제품이 다양해서 전문가가 아닌 축산 농가가 직접 생균제를 선정해 활용하기 어렵다.

가축용 생균제를 선택할 때는 먼저 제품에 들어 있는 미생물 수와 급여하려는 가축의 성장 및 생리 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어린 가축, 축사 간 이동이나 고온 등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 성장 단계 등에 따라 생균제의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

미생물 제제를 선택할 때는 설명서를 읽어보고, 반드시 수의과학검역원이나 각 시군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가능한 한 유용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고른다. 또한 최소한 1kg에는 10억 개의 유용미생물이 존재하는 공인된 제품을 선택한다. 아울러 어린 가축에게는 축종에 관계없이 유산균을 먹이는 것이 좋다.

고기소를 비육할 때, 비육전기에는 주로 바실러스 계통이 바람직하고 비육후기에는 효모 등을 먹이면 증체와 육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에게는 생균제 권장량의 1.5~2배를 먹이면 효과가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는 “생균제는 가축의 성장과 생리단계를 진단한 다음 이에 알맞은 미생물의 종류가 들어 있는 생균제제를 선정해 먹여야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축산 농가에서는 생균제를 선택한 후 사용 전에 반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㉟

〈출처 : 농촌진흥청〉